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목차>

1. 서론

2.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 1) 1단계 - 첫 번째 화살
- 2) 1단계 - 두 번째 화살
- 3) 1단계 - 세 번째 화살
- 4) 아베노믹스 2단계 -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3.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1) 세계의 자국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어려움 가중
- 2) 환율
- 3) 인구, 노동시장
- 4) 규제

4. 아베노믹스 평가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시사점

- 1) 한국도 시기적절한 통화정책이 필요
- 2) 엔저의 명과 암에서 본 한국의 선택
- 3)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5. 결론

200920847 오 준 범
201321617 최 민 규
201421340 정 대 완
201821816 김 다 정

1. 서론

일본경제의 성장역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사례들 중의 하나이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뛰어난 성과를 낸 부분이 많음을 부인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운영,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일본의 경제를 연구주제로 설정했고, 특히 최근의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이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기나긴 경제침체의 터널을 지나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일본, 그 중심에 아베노믹스가 있다. 2012년 12월 다시 일본의 총리로 취임하게 된 아베신조 총리는 양적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 정책을 한꺼번에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정부의 경제 부양정책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아베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¹⁾로 인해서 일본은 다시 새로운 경제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졸자 취업 내정률이 거의 99%에 육박하는 등 취업시장이 굉장한 활기를 띄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에서 연일 보도 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일본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또한 아베신조 총리의 목표중 하나인 국내총생산 600조엔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약 1억2천만 명 정도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달성해야 가능한 목표다. 아베노믹스를 실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엔화를 찍어내면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해 한때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2018년 국제통화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자국을 '과제선진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는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먼저 선진국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는 자신들이 참고할만한 다른 선례가 없어, 자신들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문제에 있어 일본을 잘 연구해 일본이 먼저 경험했던 과제들과 그 해결법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또 그런 고민을 통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도 탐구해 볼 것이다. 일본의 경제정책 중 국내에 적용했을 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정책들은 적극 수용하고, 반대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정책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아베노믹스 1단계 - 세 개의 화살을 중심으로

아베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당시 옛날 일본 무사가 아들들에게 화살 한 개를 부러뜨리긴 쉽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기는 힘들다고 말한 일화를 언급하며, 일본정부가 1990년 이후 시차를 두고 각각 별개로 실시한 양적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 정책을 한꺼번에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²⁾ 강력한 정부의 경제 부양정책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1) 아베노믹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을 뜻하는 말로 '아베'와 '이코노믹스'(economics·경제적 고려, 경제학)의 합성어다.

2) 다음백과, 아베노믹스부분 인용

2.1 제1의 화살 : 대담한 통화정책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통화정책으로 설명된다. 이는 물가상승률 2%를 2년 내에 달성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금융완화정책으로 엔화 강세를 시정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일본은 금리인하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는 금리조정으로는 불가능한 통화정책을 통화 공급을 통해 이루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과 그로 인한 고용량의 감소, 산출량의 감소다. 또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해 기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부실화되면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에서 탈피하고자 아베신조 총리는 '무제한적 양적완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며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양적완화³⁾란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인데 일본은 이 양적완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엔화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로인해 엔화의 본원통화량은 2012년 12월 말 132조 엔에서 2015년 말 364.4조 엔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또 보유잔액이 매년 50조 엔씩 증가하도록 장기국채매입을 확대했고 상장지수펀드⁴⁾(ETF)를 연간 1조엔 씩 매입하는 등 양적인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완화도 함께 하고 있다.

국공채 매입은 일반적인 통화정책수단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정책이자 통화량조절수단들 중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정책수단이다. 일본정부는 국채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늘려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효과는 화폐공급곡선과 화폐수요곡선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경제학의 이론에서 이자율의 하락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대시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 하고 엔고를 해소해 수출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다. 단기적으로 2014년엔 엔/달러 환율이 97.7엔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엔/달러 환율이 무려 22%나 상승하였다. 이 같은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 지속적인 엔저로 도요타 자동차가 2011년, 2012년, 2013년 연일 최고실적을 경신하는 성과를 올렸고,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파나소닉도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등 일본기업들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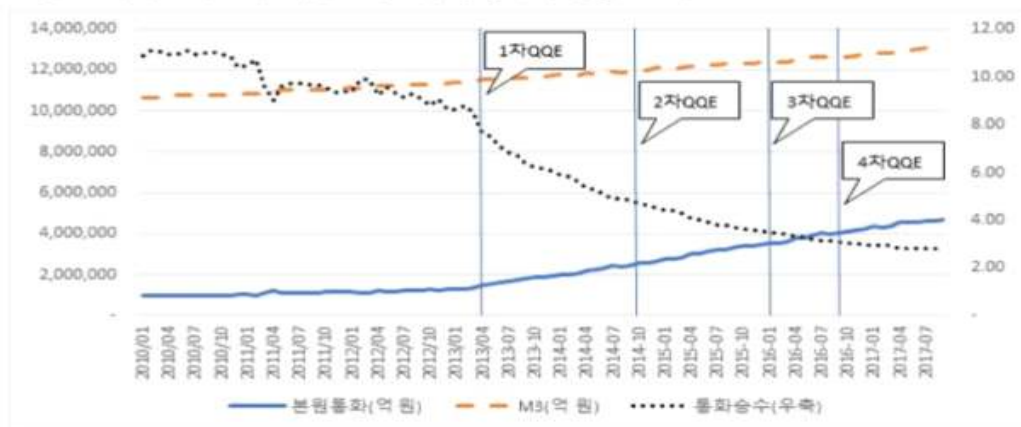
-
- 3)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하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신흥국 통화의 환율 하락) 된다. 네이버백과사전에서 인용
 - 4)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을 말한다.

특히 일본의 대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출비중이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높다. 그에 따라서 대외채권과 해외법인이 많아 엔저에 따른 환차익을 얻기가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베 총리의 집권당시 10,000선 안팎이었던 닛케이225지수가 현재는 20,000선을 돌파하고 보합하는 등 일본증시에는 훈풍이 불어왔다. 일본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이 임금도 인상해 준다면, 가계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효과는 부의효과가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산효과'라고도 하는 이 효과는 현재 소비가 미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미래 자산 증가를 예상해 투자자들이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고 정부도 그를 위해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부의효과를 통한 소비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이후의 본원통화의 증대가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아래 아베노믹스에 따른 1~4차 금융완화의 효과를 살펴보자. 통화승수는 금융완화 개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금융완화의 효과가 시중통화량(M3)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금융완화를 통한 본원통화 증대에 버금가는 물가상승률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임금정체에 따른 민간 소비 침체로 물가상승률이 본원통화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그림 1. 아베노믹스에 따른 1차~4차 금융완화(QQE) 효과



자료: 日本銀行時系列統計data檢索site(<http://www.stat-search.boj.or.jp/index.html>) 토대로 필자 작성
 주: 본원통화 및 M3는 평간 기준

출처] 김양희, 『아베노믹스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17, 8p 재인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본원통화 증가율과 통화승수 증가율간의 괴리의 주요한 원인이 임금정체에 따른 민간소비의 침체라는 점이다. 민간소비의 침체는 최근 밝혀진 일본정부의

임금통계 조작사건을 통해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들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서 임금통계를 조작했고 이 사건이 최근 밝혀졌다는 점에서, 앞선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된다. 아래는 관련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모래성 아베노믹스… 임금 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김영훈 기자>

아베 신조 총리의 최대 치적인 ‘아베노믹스’가 통계 조작에 따른 허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논란은 후생노동성이 매달 근로자 임금과 노동시간을 조사해 발표하는 ‘매월 근로통계’가 2004년부터 규정에 따른 전수조사 대신 일부 표본조사로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 499명 이하 중소기업은 전국 200만개 중 약 3만개를 추출해 조사하지만, 직원 500명 이상인 대기업 6000여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데, 대기업이 집중된 도쿄도의 경우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대상 기업 1400여개 중 3분의 1 정도만 게재된 리스트를 받아 조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499명 이하의 중소기업 표본을 교체하면서 집계한 통계수치를 발표한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을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시켰는데도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증가율이 1%를 넘은 달이 지난해 3월과 6월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500명 이상 대기업 대상 통계수치는 1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2%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6월에는 무려 3.3%를 기록, 1997년 1월 이후 21년5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임금 증가율 수치를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자랑했고,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증권계에서 통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499명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표본을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5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거듭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사히신문이 정부가 대기업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특종보도 이후 후생노동성은 최근 통계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데이터를 바꿔 통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3.3%였던 임금 상승률은 다시 조사해보니 1.4%에 불과했다.

2.2 제2의 화살 : 기민한 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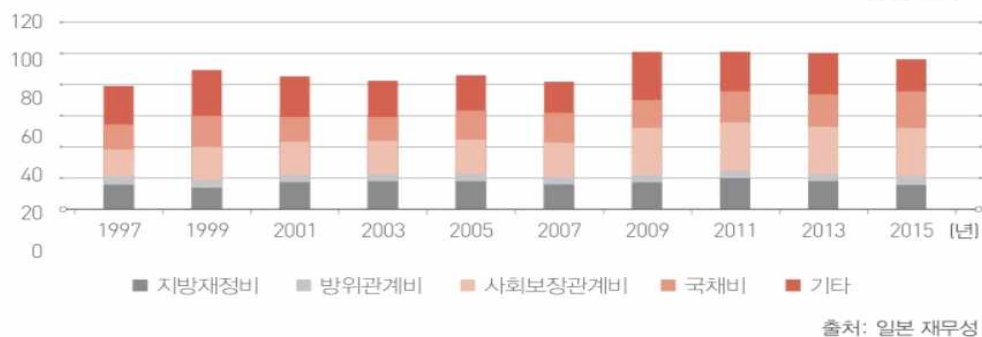
고이즈미 정권은 출범 후 1992년 당시 시작된 버블이후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을 사용한다.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고이즈미 정권 당시 직접 목격했던 대담한 양적완화 정책의 성공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경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상태였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을 아무리 낮춰도 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경제주체들은 다음기로 미루는 소비를 최선으로 생각했었고, 물가는 그에 따라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주체의 예상을 확실하게 깰 수 있을 정도의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요구되었다.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고이즈미 정부는 대담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재정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기했는데, 고이즈미가 출범하기 이전 2000년도 일본의 부채 비율은 GDP의 102%수준에 달해 언제문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정부는 사회보장비 등의 세출을 억제하여 국채 발행액이 매년 30조 엔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⁵⁾ 그러나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국채발행 제한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국채발행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재정건전화 정책은 뒤로 밀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다음연도부터 경기가 호조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채발행을 억지로 제한하지 않게 되어도 세수가 확보되어 국채 발행액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베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총수요의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인 것이다.

아베정권의 재정정책이란 공공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⁶⁾ 이중 재정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 관계비로, 이는 전체 세출의 약 32%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림5-5 일본의 항목별 세출



출처] 박상준, 『불황터널』, 매경출판, 2016, 190p 재인용

문제는 일본정부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아베노믹스 초기의 일본정부의 세입, 세출은 다음과 같다.

【표 12】 일본의 2013년과 2014년 지출예산(일반회계)

(단위: 10억 엔, %)

	2013			2014		
	금액	전년 대비	비중	금액	전년 대비	비중
국채비용	22,241.5	1.4	24.0	23,270.2	4.6	24.3
이자지급	9,902.7	0.5	10.7	10,131.9	2.3	10.6
원금상환	12,338.8	2.1	13.3	13,138.3	6.5	13.7
기초재정수지대상지출	70,370.0	2.9	76.0	72,612.1	3.2	75.7
사회보장	29,122.4	10.4	31.4	30,517.5	4.8	31.8
지방이전	16,392.7	-1.2	17.7	16,142.4	-1.5	16.8
공공사업	5,285.3	15.6	5.7	5,968.5	12.9	6.2
교육과학	5,368.7	-0.8	5.8	5,442.1	1.4	5.7
국방	4,753.8	0.8	5.1	4,884.8	2.8	5.1
기타	9,447.1	-11.8	10.2	9,656.8	2.2	10.1
합계	92,611.5	2.5	100.0	95,882.3	3.5	100.0

자료: 일본 재무성, "Highlight of the Budget for FY 2012, 2013, 2014"

출처] 조경업·허원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41p 재인용

5) 박상준, 『불황터널』, 매경출판, 2016, 121p

6) 조경업, 허원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4, 40p

[표 13] 일본의 2013년과 2014년 세입예산

(단위: 10억 엔, %)

	2013			2014		
	금액	전년 대비	비중	금액	전년 대비	비중
조세수입	43,096.0	1.8	46.5	50,001.0	16.0	52.1
기타수입	4,053.5	8.3	4.4	4,631.3	14.3	4.8
국채발행	42,851.0	-3.1	46.3	41,250.0	-3.7	43.0
건설채권	5,775.0	-2.3	6.2	6,002.0	3.9	6.3
SDFB	37,076.0	-3.3	40.0	35,248.0	-4.9	36.8
연금관련 SDFB	2,611.0	-	2.8	-	-	0.0
합계	92,611.5	2.5	100.0	95,882.3	3.5	100.0

주: SDFB(Special Deficit Financing Bonds)
 자료: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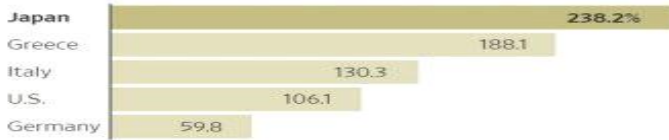
출처] 조경엽·허원재,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42p 재인용

일본정부는 전체예산의 약 45%정도를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지출의 약 24%를 국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갚는데 쓰는 것이다.(2016년 이후 약 37%정도를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운용으로는 언제 파산을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도에 소비세를 8%로 인상하고, 2019년도 하반기에 다시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계획에 있는 것은 이러한 재정운용의 후폭풍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채무는 과거 고이즈미 정부시절 GDP의 102%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230%에 달하는 수준에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단연 1등의 부채수준으로 무디스 신용평가등급이 C에 해당하는 그리스보다도 높은 수치이다.(일본은 무디스 신용등급 A1, 한국 A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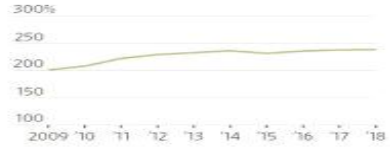
Debt Debate

Japan has far more debt as a share of GDP than other countries, but the debt level has begun to stabilize. With interest rates low, Japan uses only a small portion of its revenue for interest payments.

Government debt as a share of GDP,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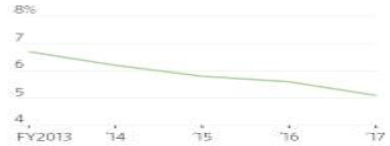
Japan's debt as a share of GDP



Yield on 10-year government bond, 2019*



Japan's government interest payments as a share of re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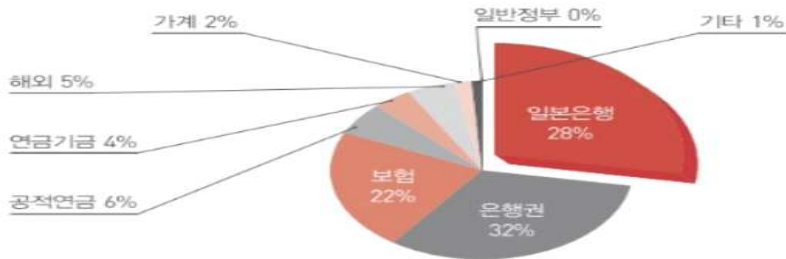


*As of March 28 *Fiscal year 2017 ended March 2018
 Sour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ebt to GDP); FactSet (10-year yield); Japan's Cabinet Office (interest payment)

출처] 송경재, "日 세계 최대 채무국인데..." "빛 더 내라" 여론 고조, 파이낸셜뉴스, 2019

이 때문에 지금의 일본경제는 빛 더미에 올라타 전진하는 양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채무형태는 분명 남미나 유럽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과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림5-3 일본 국채 보유자 현황(2015년 9월)



출처: 일본 재무성

출처] 박상준, 『불황터널』, 매경출판, 2016, 184p에서 재인용

일본 국민들의 저축으로 지탱되는 일본의 은행권과 보험회사가 일본국채를 반 이상가지고 있고 국채의 30%가까운 지분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사들인 국채이기 때문에 대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은 약 1천12조4천310억엔의 대외자산, 328조 4천470억엔의 대외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외채권국이다.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과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무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역수지가 적자로 접어들어 계속 확대되고 저축률 하락, 금리인상,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지출 증대 등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요인이 확대되고 국채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금과 같은 재정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2019년 현재 아베정권은 일본이 너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소비세 외에도 세금을 인상하고 의료복지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2.3 제3의 화살 : 새로운 성장전략 정책

2014년 6월 24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1차 아베노믹스의 완결인 ‘성장전략’을 확정 발표 하였다. 7)정책의 목표는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2020년 까지 명목 GDP 성장률 3%, 실질GDP 성장률 2%,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 150만 엔까지의 증가 등 경제성장이다. 앞서 거론한 1,2 화살만으로는 경기부양의 방점을 찍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입한 정책으로 후술할 2차 아베노믹스의 주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주된 내용으로는 우선 법인세를 인하하여 외국기업의 대일투자증가를 꾀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아베정부는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경기부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수 십년간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임금인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8)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일부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분을 메꿀 자원 마련 등이 불확실한 점, 법인세 납부대상이 전체기업의 30%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의 설비투자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7)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46-47p 재인용

8)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48p 재인용

다음으로 규제개혁 및 산업재흥전략이 있다. 아베정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인구로의 유입을 장기적인 질적성장의 동력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각종 산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여성과 외국인이 노동시장으로 보다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9)2013년만 해도 일본의 여성 임원 비율은 1.3%에 불과해 한국을 밀돌았는데, 2015년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시법을 만들어 4년 만에 6.4%로 올라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현 정부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유리천장'을 깨고자 노력 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의 10)유리천장 지수에서 일본과 함께 꼴지를 다투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시장 육성을 위해 진료체계의 변화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농업 및 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을 꾀하는 정책과 함께 국가전략특구 정책을 시행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책들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정립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고 판단하기에는 의문점이 따른다. 얼핏 보기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청사진만 제시하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전시행정에 가깝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의식한 결과인지 아베 정부는 2016년 2차 아베노믹스의 발표를 통해 각각의 전략의 심화를 꾀하였다.

2.4 아베노믹스 2단계 -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11)일본정부는 2016년 6월 '1억 총활약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2차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제시한다. 연령, 성별 등의 모든 차별요소를 배제하여 기존의 비경제활동 인구들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을 증대시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임금정체를 해소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요지이다.

새로운 세 개의 화살 중 1화살은 강한경제를 목표로 한 1차 아베노믹스의 강화시도라 볼 수 있다.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자극을 가하여 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1차 아베노믹스의 3화살인 새로운 성장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 첨단기술 산업화, 노동생산성 제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 산업전반에 걸쳐 1차 때 제시한 정책들을 세분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와 구분되는 점은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자하는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책의 일환으로 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2,3화살은 각각 육아지원과 사회보장강화를 목표로 하며 일본의 고질적인 인구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성향상을 꾀하는 정책이다. 2026년 까지 합계출산율 1.8명 달성, 2026년 간병이직 제로 달성이 정책목표이며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청년 고용의 안정과 처우 개선으로 결혼부터 육아에 이르기 까지 꾸준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 강화에 있어

9) '한국 여성임원 비중 2.3%'...OECD 중 7년째 꼴찌, 연합뉴스 기사 인용

10)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 10가지 지표를 가중 평균해 결과를 내며, 지수가 낮을수록 직장 내 여성차별이 심하다는 뜻이다.

11) 김양희, 아베노믹스 추진현황과 시사점, 2017,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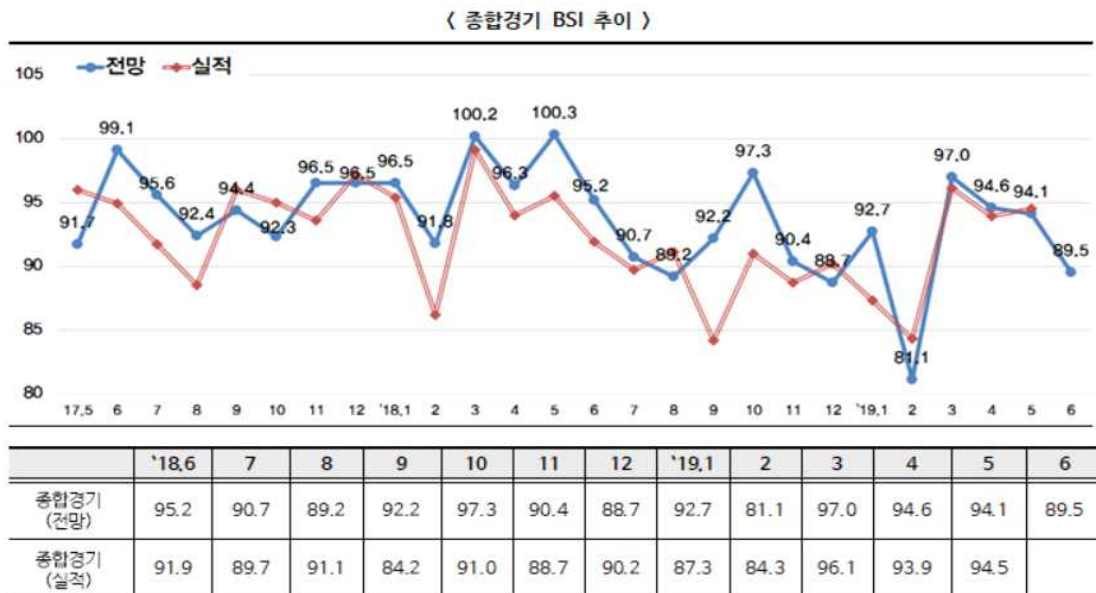
서는 노령인구가 많은 일본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 맞춤형 간병서비스의 공급을 목표로 하여 실버의료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차 아베노믹스의 정책들은 결국 일본 국내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선순환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베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며 본래의 기획의도대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잘 지켜진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용점이 상당 할 것으로 본다.

3. 한국경제 진단

우리는 이제 3장에서 현재 한국경제를 진단해 보려고 한다. 최근 한국경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위주로 4가지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경제를 분석해 보았다. 세계의 자국 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어려움의 가중, 환율, 인구·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다.

3.1 세계의 자국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어려움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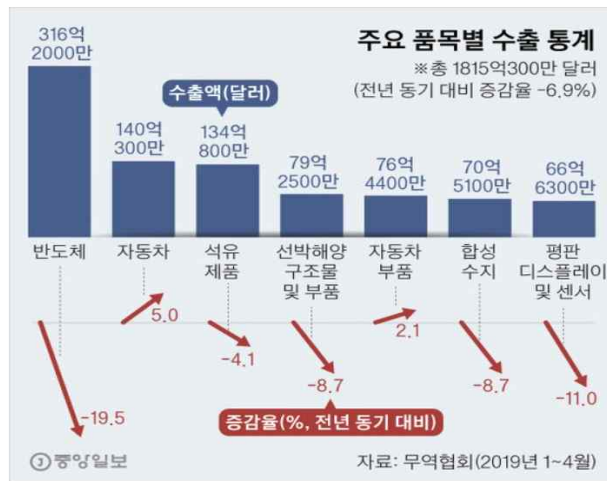
최근에 큰 문제는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에 의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세계는 지금 자국 보호주의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보호무역주의의 여파로 인해 한국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했고 동시에 앞서 언급한 인구구조적인 문제와 국내 투자경기의 침체 등을 원인으로 내수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KERI 데이터베이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5로 나타나면서 18년 5월(100.3) 이후 13개월 연속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중국 무역 갈등이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나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미국·중국 무역전쟁은 대국굴기·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무역시장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일어나는 패권다툼이다.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중 무역전쟁이 5월초 다시 격화되면서 환율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가한 것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원화가치가 작년 말 대비 5% 이상 절하되면서,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채무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자금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주요품목별 수출통계”, 2019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은 미국·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대중수입 감소로 중국 또한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생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원화의 절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증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환율불안 등이 기업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쳐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이같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2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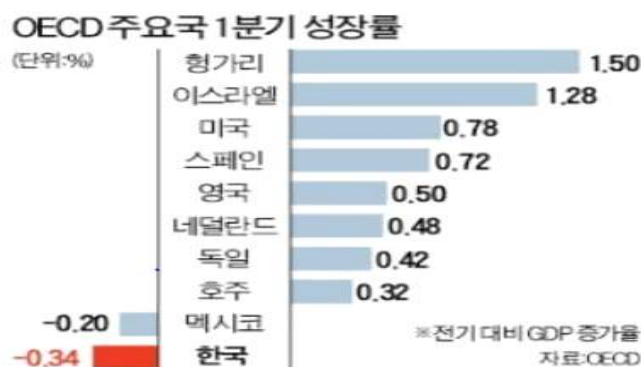
최근 한국의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지금 세계경제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이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도 강하게 대응하는 등 양국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 주는 자료다.



출처] 네이버 금융, 3개월 원/달러 환율

더 큰 문제는 원화 약세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원화 약세가 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수출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환율상승 현상이 우리경제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최근 들어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상승이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이 다음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현재까지 성장률이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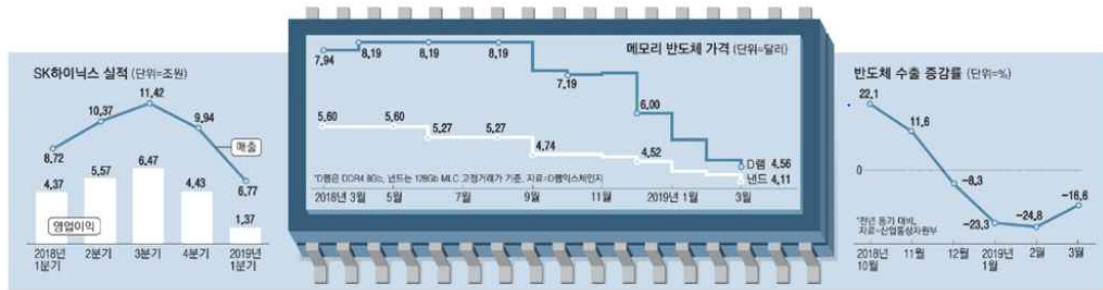


출처] 이태훈 기자, “한국경제성장률 OECD22개국 중 꼴찌”, 한국경제, 2019

둘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싸져 수출업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화약세 현상이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요즘 같은 경기 부진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기사에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경기 수축기에서 실질환율의 하락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국면 전환을 고려한 수출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확장기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¹²⁾이 1%포인트 하락하면 수출 증가율이 1.67%포인트 상승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수출 수축기에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¹³⁾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실 최근의 한국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사실 반도체업계의 호황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도체 시장이 이전과 같지 않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을 견인했던 기업들의 부진 때문인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최근의 환율상승은 이 같은 한국의 상황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는 신호일 수도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처] 김규식·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반도체 착시’ 사라지자... 허약한 경제 민낯 드러났다”, 2019

최근 한국은 무역은 물론, 환율 면에서도 중국과 동조화하는 면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흔들수록 한국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세계 경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다시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경기의 후퇴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3.3 인구, 노동시장

오랜 시간동안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저성장 문제를 겪고 있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국도 겪고 있어 같은 전철을 밟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경우 인구구조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생산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12) 실질실효환율이란 미국,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실제 가치를 말한다.

13) 아시아경제, “1200원 목전 원·달러 환율, 긍정보다 부정요인 많아(종합)”, 2019 참고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p)

기간	1인당 실질 GDP (1+2)	취업자/인구 (1)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 (2=3+4)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3)	총요소생산성 (4)
1991~2000	5.8	0.7	5.2	3.2	2.0
2001~2010	3.8	0.7	3.1	1.5	1.6
2011~2018	2.4	0.9	1.6	0.8	0.7

주: 연도별 증가율 및 기여도를 로그차분으로 근사하였으며, 표의 수치는 10년 기간의 단순평균값으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2019 경제동향』, 2019, 42p

1인당 경제성장률이 변화하면서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는 2010년대에 노동생산성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의 노동생산성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2000년대에 비해 1.4% 낮은 2.4%를 기록하였다. 한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의 1인당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200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 1인당 경제성장률의 둔화속도를 낮추었다.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하며 둔화되었는데, 총요소생산성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는 2000년대의 절반 수준인 0.7%로 감소하였고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여 0.8%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다행히 물적자본의 기여도가 하락한 정도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둔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의 부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발표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엔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양적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선 생산성의 향상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2065년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세와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세는 OECD 국가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자 중 고령인력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변화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의 근로시간 감소로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8년 노동생산성 동향’에서 지난해 전 산업 노동생산성지수¹⁴⁾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08.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14) 부가가치나 산업생산 등의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부가가치가 크고 노동 투입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노동투입의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정부 소비와 수출은 늘어났지만 민간소비가 유지되고 투자는 감소하면서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3.3%에서 지난해 2.5%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투입 증가율은 근로시간 감소세가 확대되고 근로자 수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난해 -1.1%를 기록했다.¹⁵⁾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노동투입이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폭이 커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고 한국경제원은 발표했다.

3.4 규제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28위에 그쳐 말레이시아와 태국 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는 기사가 보도 된 적이 있다.¹⁶⁾ 기업의 효율성 순위가 뛰어올랐고 기업가 정신 순위도 상승했지만 정부 효율성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기업 관련 규제 순위가 하락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 마디로 기업은 보다 효율적이 되어 가는데 정부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정부 제도의 측면에서 여러 번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과거 국가경쟁력지수(GCI) 중 제도 구성 요소의 순위를 살펴보면 2013년 74위 2014년 82위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부분은 ‘정부규제의 부담’이 96위, ‘법체계의 효율성’ 113위,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로 이는 OECD 가입국가라고 하기 민망한 순위이다.¹⁷⁾ 2018년의 제도 부문 순위는 27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정부 규제의 부담’ 등의 항목은 여전히 79 위, ‘정부의 미래지향 항목’ 49위 등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보다 유연한 규제 방침으로 신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에 물꼬를 띄워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신약 개발 관련 등의 연구 정책에 규제 예외를 두어 연구에서 실용화까지 매끄러운 연결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제약산업에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이 분야의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비식별 익명 의료 데이터 이용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경쟁국들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바이오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관련 산업들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 개혁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슈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화관법이란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새롭게 도입된 이 법은 이전 79개의 기준을 413개로 늘려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들은 도금 주물 열처리 등을 하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화관법을 통과해 ‘영업허가’ 절차를 밟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15)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감소 영향,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 kbs뉴스 기사 참조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27445

16) 이태훈, “한국 국가경쟁력 28위…태국보다 낮아졌다”, 한국경제신문, 2019

17) 김용진, “성장이론의 소개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아시아금융포럼”, 2017에서 재인용

것이다. 총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장외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평가서를 업체가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워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영세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 들어간다. 또 평가서를 작성해 보내도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 군데 뿐이라 이 절차 하나만을 완료하는데도 약 30~60일의 시간이 걸린다.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 업체들은 이 과정도 통과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다음 절차인 취급시설 검사는 너무도 까다롭고 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도 화학관련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영세업체가 감당하기는 너무 고급인력이라 감히 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미신고 사업장을 점검, 화학물질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기존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¹⁸⁾ 정부의 미숙한 규제 때문에 우리의 뿌리산업이 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도 몇가지 한계점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넘어 시장 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¹⁹⁾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 받는 핀테크의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청을 한 서비스가 105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된 사업은 임시허가 기간이 1년, 실증특례 2년 연장신청으로 기간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 중 관련법이 정비된다는 보장이 없다. 가령 1~4년 중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에 관해서는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기간 연장이 없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 수 있다. 또 샌드박스를 신청한 어떤 신사업이 과기부 담당 사업이 아니고 금융위 담당 사업이라는 등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회피를 위해 담당 부처로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혁신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유연한 행정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에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아베노믹스 평가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시사점

4.1 한국도 시기적절한 통화정책이 필요

일본은 과거 통화정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일본의 버블경제의 경우 중앙은행의 잘못된 금리정책도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80년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에서 89년 5월부터 90년 8월의 16개월 동안 금리를 2.5%에서 6%까지 인상해 단기간에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180도 정책을 바꿔버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금리를 인상해 과열된 경기를 잡으려 한 것이다. 또 90년 4월에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당시 대장성²⁰⁾ 내부는 금리정책의 사용에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금융과 세제는 부동산 대책의 조역일 뿐 주역이 아니다”(하시모토

18) 김낙훈, “[단독] 까다로운 '화관법 폭탄'에...손도 못댄 영세中企 수천곳 '줄폐업' 위기”, 한국경제신문, 2019

19) 네이버 지식백과 『규제 샌드박스』

20) 대장성은 일본의 과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2001년의 중앙성청개편으로 사라졌다. 메이지 유신부터 존재했던 기관이다. 2001년 중앙성청개편 이후에는 재무성으로 권한이 넘어갔다.(위키백과, 일본의 대장성)

류타로 당시 대장상), “자유경제에 반하는 난폭한 조치”(쓰치다 마사아키 은행국장)라는 게 대장성의 속내였다. 그러나 하시모토는 대장성을 물러난 이후 “당시 (버블 제거를) 더 빨리 했어야 했다”며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열탕-냉탕’식 정책이 버블을 서서히 가라앉히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시킨 것이다. 이후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끊임없는 저성장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고 경제는 장기간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약화된 소비심리는 좀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버블붕괴이후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2006년 ~2007년 세계적인 경기 호황시기에 잠시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었으나, 곧 이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초저금리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증대와 그로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는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결국 일본은 돈 풀기만을 통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과거의 기민하지 못했던 대응의 결과가 무려 20년 이상이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을 집행 할 때, 금리도 조정가능하다면 더욱 강력한 통화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현재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은 이제 과거의 일본과는 다르다. 지금 일본은 대담하고 빠르게 통화정책들을 집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에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29일, 이전에 유래가 없던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과거에 없던 마이너스 금리²¹⁾와 같은 것 정책을 도입하는 과감함도 보여 준 것이다.

마이너스금리 시행초기에는 자본유출이 늘어나면서 엔화가치가 절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증대를 통해 경제환경을 더욱 친기업적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가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금리인상전망악화 등으로 엔화가치가 다시 반등하면서 마이너스금리의 효과가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금리의 효과가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일본정책당국의 이런 과감하고 빠른 대응을 한국경제가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금융완화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갔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달러가 불안해지자 엔화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오히려 엔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엔고 쇼크로 인해서 후지필름의 경우 연간 이익이 600억엔~700억엔이 감소하는 등 엔고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같은 금융위기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상황이 판이하게 달랐다.

앞서 살펴본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를 초래한 일본정책당국의 대응과 최근 일본정책당국의 대응 방법과 그 속도차이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면, 정책당국의 시기적절한 대응이

21) 일본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적 완화정책을 폈으나 효과가 줄어들자, 2016년 들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정책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다.

최근 몇 년 간 미국은 거의 홀로 경기호황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제로였던 기준금리를 2.25%~2.5%까지 높혀 긴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는 최근 다시 침체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다음 경제위기 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등장했다. 미국의 경우 금리를 인상해 두어서 다음 통화정책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근래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면 위기가 올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계속 기준금리를 건들지 않고 있다. 지금은 아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저금리는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이어졌다. 특히 이 같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특히, 최근까지도 이어진 끝없는 집값투기 광풍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시기적절한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다시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한국이 초저금리 상태인데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비정상적 금융완화에 의존해서 경제를 지탱하게 되어서 ‘한국도 일본처럼 제로금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4.2. 엔저의 명과 암에서 본 한국의 선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통화정책으로 일본정책당국은 엔화공급확대를 통해 엔화의 가치하락을 유도하여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서 고용을 늘리고 그에 따라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아베노믹스는 과거 일본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과거 일본은 내수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던 국가였다. 일본경제의 전성기 시절 일본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20%정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경제의 30%정도를 차지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만 합쳐도 세계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던 시절이라 일본입장에서는 굳이 통상확대에 주목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일본은 최근에도 어느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경제에 있어서 내수가 그 중심이 되는 국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경기침체와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겹쳐 내수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위축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이전까지 세계경제규모 2위의 지위를 차지하던 일본은 결국, 2010년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제 일본도 과거와는 달리 내수중심의 경제에서 통상확대를 통한 수출도 함께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상황과 그 지위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도 변화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베노믹스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은 아베노믹스가 주도한 엔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마쓰다자동차와 후지중공업은 수출 실적이 좋아지면서 직원들이 휴일까지 일부 반납해가며

생산라인을 돌렸을 정도였다. 닛산도 수출용 차량 부문은 줄곧 적자였지만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해 졌다.

실적 개선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기업도 늘어났다. 2017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 증시 상장기업 가운데 내부유보금이 차입금 규모를 웃도는 ‘실질 무차입 경영’ 기업이 전체의 5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래의 자료는 도요타자동차의 재무정보가 요약된 표이다.

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결 판매 대수(천대)	8,524	8,913	7,567	7,237	7,308	7,352	8,871	9,116	8,972	8,681
환율(엔/달러)	117	114	101	93	86	79	83	100	110	120
매출(억엔)	239,480	262,892	205,295	189,509	189,936	185,836	220,641	256,919	272,345	284,031
영업이익	22,386	22,703	4,610	1,475	4,682	3,556	13,208	22,921	27,505	28,539
영업이익률	9%	9%	-2%	1%	2%	2%	6%	9%	10%	10%
연구개발비	8,907	9,588	9,040	7,253	7,303	7,798	8,074	9,105	10,045	10,556
매출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4%	4%	4%	4%	4%	4%	4%	4%	4%	4%
설비투자비	14826	14802	13025	5790	6423	7067	8527	10007	11774	12925
매출 대비 설비투자 비율	6%	6%	6%	3%	3%	4%	4%	4%	4%	5%

출처] 토요타주주총회(토요타자동차 재무정보)

영업이익자료에 주목해 보면,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2012년 이래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확실히 수출기업들에게 있어서 환율변동의 효과가 그 기업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본 내의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파나소닉, 토요타, 닛산 등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엔저가 국가경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아니다. 엔저의 1차적인 부작용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다.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식료품과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공산품 등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기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도 가계 살림에는 부담이 되었다.



2014년 수출 무역 의존도 (자료 출처: 국제 통화 기금 IMF)

출처] 네이버 통계청 블로그

위의 자료는 2014년 기준 세계의 수출무역 의존도를 보여준다. 앞서서 엔저의 명과 암에 대해서 엔저의 효과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있었으나, 물가상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환율정책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높은 수출무역 의존도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기업친화적인 환율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즉,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율을 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더 유리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물론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인위적인 환율의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책들이 조금 더 무게를 두어 자연스럽게 환율을 변동시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앞서 시기적절한 통화정책이 한국경제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과열된 국내의 투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또 통화정책의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금리의 인상이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해 금리의 인상·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심한 부분이다. 최근 각종 경기 지표 부진, 저물가, 금융안정의 위협 요소로 꼽히던 가계부채 상승률의 둔화에 따라 국내외 기관들이 금리 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KDI는 앞서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는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재정책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IMF는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일제히 완화적 통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내외 기관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권고 하면서 한국경제에서 금리인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리인상이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투자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으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다. 2018년 말 30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투자가 반드시 차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즉, 투자와 금리간의 반비례관계가 다소 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투자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단지 기업들은 지금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위험을 안고 투자에 뛰어들길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이 같은 소극적인 투자성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인세에 다음의 세금을 추가해 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대규모의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추가시켜서 2015년부터 3년간 시행했으며, 최근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세법을 개정해 2020년까지 연장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투기열기를 낮추고, 외국자금의 국내 유입을 통한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혀 줄 수 있게 하는 금리의 인하가 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다 적절한

통화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수출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생각해 볼 때, 금리인하 정책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면 국내 경기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이익을 냈다. 이들 산업의 성장이 최근의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1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반도체 수출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본사 기준)은 62조 45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조 9660억원보다 95.4%(30조 4088억원) 늘어나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인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대 그룹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52.2%를 ‘반도체 투톱’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1.3%에서 21% 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사상 최대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철강 등 일부업종에서만 영업이익이 증가해 산업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²²⁾

이처럼 최근 한국의 산업들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정체하거나 역성장을 하고 있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이런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높은 수출기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시장이 이전만큼의 활기를 띄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이전보다는 줄어든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1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다. 또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과감하게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나치게 기업들만을 위해서 환율정책이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인건비 등의 여타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대한민국내의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보다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존재 목적에 입각해서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하나라도 더 국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보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더한 인구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굳이 일본의 케이스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한국의 인구구조 위기상황을 대변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끝이 보이질 않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연애마저 포기하는 사회가 되었고 따라서 자녀계획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에 민감한 수출기업들에 무게를 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지식경제신문, 화이트페이퍼, 인용

4.3.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일본이 GDP의 230%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선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점과 일본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이 있다. 엔화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화 다음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의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대화에서 미국은 GDP 대비 107%, 일본은 220% OECD 평균이 117%인데 한국은 40%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운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을 확장할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원화의 힘이 미약하고 국가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이상의 채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40%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에 불과 하며 심각한 불경기와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에서는 어느정도 재정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IMF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경제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40%라는 숫자를 마치 신앙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체적인 숫자에 얽매어 정책의 유연성을 포기하기 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균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계는 물론 정부의 순자산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의 부채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흔치 않은 공기업의 부채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적정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과제가 되겠지만 현재의 수준이상으로 재정확대를 해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빚을 지는 자체가 아니고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한 투입이 이루어지면 성장 동력 확보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과거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목적은 대출금리 인하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바란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성장정체에 빠진 상태였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흘러들어가 버블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느장 대응을 하고 말았다. 1985년에서 1990년 버블이 발생하고 1990년 중반까지도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대출총량규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급격한 정책선회와 같은 노력을 했으나 버블을 천천히 잠재우지 못하고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과거와 다르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은 과감하고 기민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는 과감한 모습도 보였다.

우리는 일본의 정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기민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한국정책 당국도 본받아 경제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의 침체나 과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눈치를 보던 한국경제는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동결만 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역전이 발생한 상황이 되었다. 최근 다시 미국이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째 동결 되어온 금리를 이제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봤다. 그리고 만일 금리를 조정한다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여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재의 담보 상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을 보고 환율이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린 판단이다. 물론 수출기업을 성장시켜 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생산설비나 인력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 일자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고용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반드시 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탈피하여 확장을 시도, 수출기업의 지원이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자본을 투입하면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 나라 규모의 경제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서, 우리가 보던 책에 있는 이론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례가 존재한다면 그 것을 이용해 예상되는 아웃풋과 실제 아웃풋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사례를 통해서 이를 한국경제에 대입시켜보고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한국의 경제정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경제상황에 빠르게 대응해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정책당국의 노력, 금리인하를 통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제기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조경엽·허원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4
- 김세완·최문정, 『국면전환을 고려한 수출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은행, 2018
- 김양희, 『아베노믹스 추진현황과 시사점』, 2017
- 박상준, 『불황터널』, 매경출판, 2016
- 한국개발연구원, 『2019 경제동향』, 2019
- 김영훈 기자, “모래성 아베노믹스... 임금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뉴스코프, 2019
- 이태훈 기자, “한국경제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한국경제, 2019
- 김규식·용환진 기자, “반도체착시 사라지자...허약한 경제민낯 드러났다”, 매일경제, 2019
-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감소영향”, KBS뉴스 기사, 2019
- 이정운 기자, “한국 여성임원 비중 2.3%... OECD국가 중 7년째 꼴찌”, 연합뉴스
- 한국경제연구원, KERI 데이터베이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네이버 통계청 블로그